



정치토론회

'호국보훈의 달' 6월, 보훈정책 방향 이대로 관철은가?

일 시 | 2016년 6월 23일(목) 오후 2시30분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202호 회의실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프로그램 】

| 시 | 간 | 내 | 용 |
|-------------|---|-----|--|
| 14:15~14:30 | 등 | 록 | |
| 14:30~14:35 | 개 | 회 | 개회 및 사회 :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 14:35~14:55 | 발 | 제 1 |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보훈정책 방향 : 오일환 (보훈교육연구원장) |
| 14:55~15:15 | 발 | 제 2 | 보훈보상의 사각지대 해결방안 : 남광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
| 15:15~15:25 | 토 | 론 1 | 차승만 (백석대학교 교수/한국보훈정책연구소장) |
| 15:25~15:35 | 토 | 론 2 |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
| 15:35~15:50 | 중 | 합 | 토론 |

【 목 차 】

발 제

- 발 제 1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보훈정책 방향
: 오일환 (보훈교육원장) 09
- 발 제 2 보훈보상의 사각지대 해결방안
: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28

토 론

- 토 론 1 차승만 (백석대 교수/한국보훈정책연구소장) 35
- 토 론 2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37

〈'호국보훈의 달' 6월, 보훈정책 방향 이대로 괜찮은가〉

발 제

[발제①]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보훈정책 방향

오 일 환
보훈교육연구원장

1. 들어가며

- 2016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도로변이나 관공서에 걸린 “보훈은 살아 있는 사람의 책임, 호국은 우리 모두의 의무”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고 판단됨
 - 보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물질적 보상과 정신적 예우를 하는 것을 뜻한다는 점에서 마땅히 현재의 국가 구성원인 살아있는 사람들의 책임임
 - 호국은 외부의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영속을 위하여 당연히 국민 된 우리 모두의 의무여야 함
 - 그런데 보훈 영역의 물질적 보상은 경제 발전과 함께 상당 수준 개선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의무로서의 호국 영역은 오히려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실정임

- 우리의 근현대사는 수난과 국난 극복의 역사였기에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이 수없이 많음
 - 따라서 우리의 근현대사는 ‘보훈의 박물관’을 이루는 근원이었다고 할 수 있음
 - 그렇지만 우리는 국가보훈이 가지고 있는 국민통합의 기능을 잘 활용하지 못함

- 우리 사회는 다원성이 강조되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맞아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20세기 신생 독립국가들 가운데, 대한민국은 경제 발전과 정치발전을 가장 성공적으로 이룩한 모범적인 나라임
 - 산업화의 대성공으로 ‘한강의 기적’이라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였고, 연이어 정치민주화도 성공적으로 이룩함
 - 그러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안보 환경과 북한의 직접적 군사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 안보의식의 해이, 이념적 갈등과 분열,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갈등의 심화로 공동체 기반이 취약해져 내적 안보 상황이 위협 받고 있는 양상임
 - 우리나라의 안보는 주변 미·일·중·러 4강의 각축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반도의 지정

- 학적 위치, 금년 1월 초 4차 핵실험까지 감행한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 위협, 거기에다 대내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극심한 갈등과 분열의 심화로 말미암아 큰 위협을 받고 있음
- 눈에 보이는 물질적 측면은 풍요로워지고 편리해진 것이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한국사회 내에는 빈곤감과 박탈감이 초래됨으로써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갈등의 심화와 분열의 골이 깊게 패임
 -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한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며,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국민통합을 크게 저해하는 근본 요인이 되고 있음
- 그럼에도 마땅히 대화·타협·합의의 정치과정을 통해 국민통합과 국리민복을 위해 제일선에서 힘써야 할 정치사회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2002년 이후, 중앙일보의 국회의원 이념 평가에 따르면 일반국민보다 국회의원의 이념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전국 고등학생·대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국민통합인식을 조사한 결과, 우리사회 갈등 악화의 원인으로 ‘여-야 정치갈등’을 꼽은 경우가 52.9%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빈부격차 47.4%, 언론의 선정적 보도 경향 39.8% 순이었음¹⁾
- 오늘날 글로벌화, 민주화, 자율화 등 다양성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시대적 특성인 복잡성, 불안정성, 불확실성의 심화로 말미암아 국가 정체성이 약화됨으로써 국민통합이 저하되고, 나아가 국가의 내적 안보가 위협을 받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음
- 포스트모던 시대의 특징인 다양성의 확산, 신자유주의의 확대에 따른 양극화 현상의 심화, 그리고 인터넷과 SNS 등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등은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여건임
 - 한국사회 내 수많은 담론의 난무는 각종 유언비어나 음모론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유발하며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정치가 국민통합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보훈의 상징적 기능을 통한 적극적인 국민통합 노력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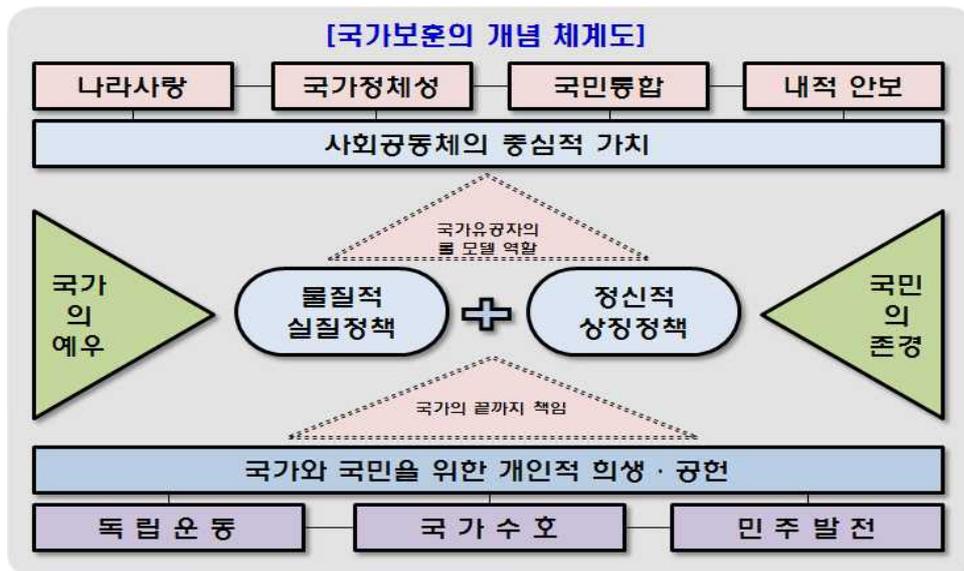
2. 보훈의식 강화의 필요성: 보훈선양정책 강화

- 국가보훈 관련법 가운데 「국가보훈기본법」, 「독립유공자예우법」, 「국가유공자법」은 각기 그 제정 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1) 『중앙일보』, 2015년 8월 15일자

- 국가보훈정책의 모범에 해당하는 「국가보훈기본법」 제1조(목적)에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독립유공자에우법」 제1조(목적)에서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명기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법」 제1조(목적)에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국가보훈은 국가를 위해 공헌 또는 희생한 사람들, 그 가족 또는 유가족에 대한 물질적 보상과 정신적 예우를 의미하는데, 이처럼 보훈 영역에서 물질적 보상과 정신적 예우가 강조되는 것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답과 함께 공동체 의식과 국가정체성을 함양함으로써, 국민통합을 다지고 나아가 내적 차원의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 보훈의식은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나라사랑 정신을 기본으로 하는데, 보훈이라는 용어 자체만을 놓고 볼 때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대해 보답하는 마음으로 풀이되나, 그 해석에 있어서는 호국정신, 나라사랑정신을 포괄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음²⁾

<그림 1> 국가보훈의 개념 체계도



2) 이희창·강정희, “보훈의식의 영향요인에 대해 고찰: 제도적 여건과 사회자본 비교,” 『한국보훈논총』 제10권 제1호(2011), p. 8

- 국가보훈은 국가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공헌과 희생의 가치를 통하여 국가공동체 의식과 국가정체성을 배양하고, 이를 국민통합으로 유도하여 국가와 사회를 유지·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삼는 고도의 상징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보훈정책은 곧 국가상징정책의 요체라고 할 수 있음³⁾
 - 보훈의식과 관련한 국가보훈정책은 일종의 상징 정책인데, 그 기능은 국민적 일체감 형성 기능, 정치적 동원 및 정당성 제고 기능, 집단 응집력 강화 기능 등이 포함되는데, 국가는 국가보훈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집단 응집력을 강화하게 하면서 국민통합을 형성하고 필요한 경우 정치적 동원의 명분 제공을 얻을 수 있음⁴⁾
 - 따라서 각국은 자국의 존속과 번영을 위해 국민적 자긍심이나 나라사랑정신(애국심) 고취를 핵심으로 한 보훈의식 강화에 크게 힘을 기울임⁵⁾
- 보훈정책에 있어서 상징정책의 핵심은 보훈선양(報勳宣揚)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보훈을 널리 알린다”는 뜻으로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에 대하여 예우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신적 가치를 국민 모두에게 전파하여 기억하게 함으로써 나라사랑정신으로 승화시키는 제반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⁶⁾
 - 보훈의 이념을 통해 본 보훈선양의 개념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 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국민들에게 나라사랑정신(애국심)을 일깨워주고,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음⁷⁾

3. 보훈의식의 실태와 보훈의식 강화의 중요성

- 국가보훈처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보훈의식조사’로, 2012년을 제외한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나라사랑의식조사’⁸⁾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보훈의식 실태를 파악해 오고 있는데, 이는 보훈의식과 나라사랑의식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2010년에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을 계기로 국민의 안보의식이 고조

3) 형시영, “국가보훈의 제도적 상징성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제25권 제2호(국가정책연구소, 2011), p. 8

4) 정원섭, “상징적 국가보훈정책의 실질정책화의 연구,” 『한국보훈논총』 제1권 제1호(2003), p. 97

5) 이희창·강정희, “보훈의식의 영향요인에 대한 고찰: 제도적 여건과 사회자본 비교,” 『한국보훈논총』 제10권 제1호(2011), p. 8

6) 윤태영 외, 『보훈문화진흥원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한국의정연구회, 2015. 8), pp. 11-12

7) 윤태영 외, 『보훈문화진흥원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한국의정연구회, 2015. 8), p. 12

8) 나라사랑의식 지수는 첫째, 국민정체성 및 자부심 부문에 있어서 ① 역사에 대한 자부심, ②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 ③ 국가유공자 존경정도, ④ 국경일 태극기 게양, 둘째, 국민의무 이행 및 위기극복 참여 의향 부문에 있어서 ① 전쟁 발발 시 지원의향, ② 국가 위기 시 극복 참여 의향, ③ 법질서 준수, ④ 납세의무 이행, ⑤ 참정권 행사, ⑥ 사회부조리 및 부정부패에 대한 태도 등을 세부항목으로 하여 측정되고 있음. 「2015년 국가보훈처 나라사랑의식조사」(2015), p. 5

- 됴에 따라 보훈의식(나라사랑의식)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근년 들어 다시 낮아지는 추세임
- 2015년 말 현재 한국사람들의 나라사랑의식지수는 78.1점으로 조사되어 전년도(78.5점)와 유사한 수준임
- 국가보훈처가 리서치앤리서치(Research & Research)에 의뢰하여 전국의 만 15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4년 나라사랑의식을 조사(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 2015년 11월 9일-11월16일)한 결과임(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 3.1% Point)

<그림 2> 2015년 나라사랑의식지수



* 2015년 국가보훈처 나라사랑의식조사, p. 11

- 나라사랑의식지수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50대(81.2점)와 60대 이상(84.8점)의 고(高) 연령층의 나라사랑 지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20·30대 연령층은 나라사랑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전년도 대비해서 10대, 20대 나라사랑 지수는 하락하고, 40대의 나라사랑 지수는 4.1점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갈등 현상은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는데, 2010년에 한국의 사회 갈등 수준은 조사 대상국 OECD 27개국 중 터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사회 갈등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연간 무려 82조~246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만약 한국의 사회갈등지수가 OECD 평균수준으로만 개선되어도, 1인당 GDP가 7~21%가량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⁹⁾
- 세계적 사회과학자단체의 학술프로젝트인 ‘세계가치관조사(WVS)’ 설문조사(2005~2012년 평균수치) 분석 결과, 우리나라 보훈의식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 국가의 평균값(6점 만점에 4.82)에 비해 0.03점 낮은 4.79점으로 조사 대상 국가 중 하위권(12위)으로 조사되었음

9)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3년 8월 21일 “한국사회 갈등의 현주소와 관리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제2차 국민대통합 심포지엄’에서 “한국사회 갈등의 현주소”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 박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이 분석한 내용이다. “한국 사회갈등 관리시스템 시급하다,” 『시사코리아』, 2013년 8월 21일자

- 성시경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국가보훈 의식 목표 수준을 조사대상 20개 국가의 상위 20% 및 10% 수준으로 설정할 경우, 국가보훈의 경제적 가치는 각각 89조 4천억 원 및 168조 9천억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우리나라 국가보훈의식 목표수준을 4위인 스웨덴의 5.15점으로 설정할 경우 사회갈등 요인이 11.99% 줄어들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7.36% 증가하는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핀란드의 5.47점으로 설정할 경우 사회갈등 요인이 22.66% 줄어들어 13.91%의 경제성장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¹⁰⁾
- 성시경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하는 서울행정학회 연구팀이 국가보훈처의 의뢰를 받아 2015년도에 4개월간 조사 분석한 보고서 ‘국가보훈의 경제적 가치와 효과에 관한 연구’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가 보훈의식 지수가 1% 증가할 경우 사회갈등 요인이 1.59% 감소하고 이를 통해 약 11조9천억 원, 0.98%의 경제성장 효과가 나타난다고 분석되었음¹¹⁾
- 이러한 결과는 나라사랑 등 국가보훈 의식이 사회갈등 해소를 통한 사회 통합 효과와 더불어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치를 통해 확인해 주고 있음
- 결국, 국가보훈사업에 의한 보훈의식의 증대는 사회갈등 요인을 감소시켜 사회통합(국민통합)에 기여함으로써 안보 효과는 물론 경제 효과를 크게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국력은 경제력이나 국방력과 같은 물리적인 힘, 즉 하드파워의 수준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신력, 문화력과 같은 소프트파워의 수준에 따라서도 당연히 영향을 받게 마련임
- 세계 역사는 아무리 경제적 번영과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라고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나태해졌을 때, 그 나라는 순식간에 패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음
- 레이 클라인(Ray S. Cline)은 국력 계산 공식을 제시하면서 국가의 전략(S)과 국민의 의지(W)가 결핍될 경우 ‘유행국력’이 아무리 강해도 국력의 총합은 ‘제로’가 될 수 있다고 간파함

<표 1> 클라인의 국력공식

* $P=(C+E+M) \times (S+W)$
 (P: 국력, C: 국토·인구, E: 경제력, M: 군사력, S: 전략, W: 의지)

10) “愛國心-경제성장 ‘정비례’... 분단한국 보훈의식은 하위권,” 『문화일보』, 2016년 5월 31일자; 성시경·윤성일, “국가보훈의 경제적 가치와 효과,” 『인사혁신과 국가경쟁력: 공유와 확산』(2016 한국인사행정학회 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6. 4. 29), p. 12

11) “愛國心-경제성장 ‘정비례’... 분단한국 보훈의식은 하위권,” 『문화일보』, 2016년 5월 31일자; 성시경·윤성일, “국가보훈의 경제적 가치와 효과,” 『인사혁신과 국가경쟁력: 공유와 확산』(2016 한국인사행정학회 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6. 4. 29), p. 13

4. 보훈선양정책의 현황

1) 보훈선양정책의 목적과 의의

- 국가보훈은 각 나라가 국가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개인에 대하여 그 국가와 사회구성원이 예우로 보답하는 책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보답행위는 보훈정책이라는 수단을 통해 실질적·상징적 형태로 행함
 - 실질적인 방법은 보훈 보상 등 물질적 예우를 통해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며, 상징적인 방법은 희생과 공헌의 숭고한 가치를 높이 선양하여 기억하고 후대에 계승하는 정신적 활동으로 요약할 수 있음¹²⁾
- 국가보훈정책은 실질적·상징적 형태의 보답행위를 통해, 국가를 위한 특별한 공헌과 희생에 대하여 예우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국가공동체 유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것이 보훈정책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음
 - 「국가보훈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국가보훈의 3대 주요 정책으로 ① 희생·공헌자의 공훈 및 나라사랑정신의 선양과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관한 사항, ②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③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 중 보훈 선양정책은 희생·공헌자의 공훈 및 나라사랑정신의 선양과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관한 사항을 다룸
- 국가보훈의 목적을 통해 본 보훈선양의 개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의 정신적 가치를 기억하고 계승함으로써 이를 국민의 나라사랑정신(애국심)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¹³⁾
 - 따라서 보훈선양의 개념은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 등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분들의 공헌과 희생정신이 국민과 후손들에게 애국심의 귀감이 되고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일깨우고 인식시켜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¹⁴⁾
 - 결국, 보훈선양이란 국가유공자 등의 국가를 위한 특별한 공헌과 희생의 가치를 존경하고 예우하며, 이를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계승·발전시키도록 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으며, 이들의 희생과 공헌정신을 국가사회공동체의 유지·발전을 위한 정신적 토대로서 나라사랑정신으로 승화시켜 국가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이를 국민통합으로 유도하여 국가의 내적 안보에 이바지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¹⁵⁾

12) 국가보훈처, 『호국보훈으로 하나 된 튼튼한 국가(정책자료집, 2008. 2 ~ 2013.2)』 (2012. 12), p. 5

13) 한국의정연구회, 『보훈문화진흥원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 (2015. 8), p. 12

14) 한국의정연구회, 『보훈문화진흥원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 (2015. 8), p. 14

15) 한국의정연구회, 『보훈문화진흥원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 (2015. 8), p. 14

- 「국가보훈기본법」 제2조는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이 추구하는 것이 곧 보훈선양에 있음을 알 수 있음
 - 국가보훈은 지나간 과거의 역사적 산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공헌으로 국가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된 독립·호국·민주유공자의 정신을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계승·발전시켜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가치를 만들어나가는 미래지향적 개념임¹⁶⁾
- 국가보훈의 정신적 측면인 보훈선양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정신적 기반이 되는 국민의 보훈의식을 강화하는 데 있는데, 바로 이 점에서 보훈선양은 매우 귀중한 소프트파워라고 할 수 있으며, 경제력과 군사력 등 물리력에 해당하는 하드파워와 함께 국가의 스마트파워를 증진하는 중요한 원천이라고 할 수 있음

2) 보훈선양사업의 현황

- 올바른 역사의식과 국가관 함양을 위한 나라사랑교육 강화
 - 국가보훈처는 2011년에 나라사랑교육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나라사랑연구(시범)학교 지정·운영, 초·중·고·대학생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사 사이버교육과정 운영, 보훈기념일 계기행사를 통한 국민 참여 유도 등 다양한 나라사랑교육을 추진하고 있음
 - 나라사랑교육의 유형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나라사랑 연수 및 체험교육
 - 청소년 등의 나라사랑 연수교육, 공무원의 국가정체성 교육, 보훈문화교실, 보훈캠프, 독립군체험학교 등 체험교육
 - 학교 등 나라사랑교육
 - 나라사랑시범학교, 6.25 참전유공자 보훈 특강, 교수학습경진대회 등
 - 보훈기념일 계기 학습 교재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보급
 - 나라사랑 시범학교, 도서관, 보훈교육연구원 보급·활용
 - 독립기념관 체험시설과 전시관을 활용한 역사교육 운영
 - 초·중·고교생 및 일반인 대상
 - 국외독립운동사적지 탐방 활동
 -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항일독립운동사적지 현장탐방(대학생, 초·중등 교원 등)
 - 나라사랑 프로그램 개발·보급
 - 보훈기념일 계기 온라인 이벤트, 교사용 지도서·인정교과서 개발·보급

16) 국가보훈처, 『호국보훈으로 하나 된 튼튼한 국가(정책자료집, 2008. 2 ~ 2013.2)』 (2012. 12), p. 11

*IPTV, 사이버강의, 동영상 등 온라인 매체형 자료 개발

※ 국가보훈처는 2016년도 업무계획에 있어서, 나라사랑교육을 통한 국민 호국정신 확산을 중시하고 있음

- 2016년이 ‘호국정신 함양의 원년’이 되도록 기반 공고화
 - 그간의 문제제기 해결, 나라사랑교육의 본격 확산 여건 마련
 - 기존 추진 교육은 강화하고, 신규 분야는 시범 교육 개시
 - 미취학 자녀,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교원, 일반 국민 등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라사랑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
- 나라사랑교육 전문 강사진의 체계적 확대
 - 학생·공직자·2040세대 등을 대상으로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진에 의한 애국심·안보의식·호국정신 함양 교육 추진
 - 증가하는 강의 수요를 반영한 전문강사진 확대(120 → 160명)
 - 강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신규 도입(2주 과정)하여 강의 질적 수준의 상향평준화 도모
 - 개인별 전문분야에 관계없이 영토 수호를 위한 호국정신을 교육대상자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역량 배양
 - 평가위원 확대 등 나라사랑교육 평가단을 통한 모니터링 강화
 - 수강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강의 개선 추진
- 대상별 나라사랑교육 프로그램 확충
 - 유아 대상 ‘나라사랑 꾸러기 유치원’을 신규 지정(17개), 누리과정과 연계하여 태극기 만들기 등 기본적인 국가관 교육 추진
 - 초·중·고 학교별 나라사랑 연구학교(11→20개)와 실천학교(33→50개)를 지정하여 학생 대상 애국심·국가관 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
 - 대학생을 위한 ‘나라사랑 특성화 대학’을 신규 선정·운영(3개), 나라사랑 관련 연구 수행 및 강좌 개설
- 수준 높은 교육자료 개발·보급
 - 초등 저학년을 위한 놀이·체험형 교구 제작·보급
 - * 무궁화 종이접기, 비누점토로 만드는 우리나라 등
 - 초등 고학년을 위한 계기별 교육자료 개발
 - * 천안함 피격(3. 26), 6·25 전쟁일, 7·27 UN군 참전의 날, 연평도 포격 도발(11. 23) 등
 - 중·고등학생을 위한 지역별 스토리텔링형 교육자료 개발
 - * 지역별 국가유공자 스토리 발굴, 제작
- 체험교육의 강화 위한 프로그램의 확대 및 효과성 증진
 - 현장학습 등 체험프로그램은 나라사랑정신과 호국정신을 내면화하는데 가장 좋은 교육방법

- 방과 후 나라사랑교육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지역내 체험자원과 연계된 체험 프로그램 선정·지원(29 → 42개)
- 학급 단위 우리고장 현충시설 탐방 사업은 전문 해설사 동행, 학생 참여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 내실화(1,000학급)
- DMZ체험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 보훈캠프 확대(1,000→2,000명)
- 청소년, ROTC 등을 대상으로 호국산업현장 체험 교육(2,300명)
- 공직자 대상 나라사랑교육 실시
 - 정부정책을 직접 입안하고 수행하는 공직자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해 안보전문가를 활용한 ‘나라사랑교육’ 추진
 - *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호국정신 함양
 - ‘호국보훈의 달’을 집중기간으로 설정하여 범정부적으로 실시
 - * 행자부, 안전처, 인사처 등과의 협업 강화
- 전국민 대상 나라사랑교육 실시 여건 마련
 - 정보가 없거나 프로그램이 부족해 나라사랑교육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 제공 활성화 및 추가 교육 소요 발굴
 - 교육용 웹사이트 운영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교육프로그램 안내 및 다양한 교육 자료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 교사 등의 올바른 역사관과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원·교장 집합교육과정(150→530명) 및 사이버교육과정(3,000→6,000명) 확대 운영
 - 교육대학 재학생 등 예비교사 대상 교육과정 별도 운영(140명)
 - 대형 버스를 활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나라사랑 이동교실’ 신규 개발 운영
 - 독립-호국-민주화 주제별 교육기자재 탑재하여 체험교육 참여 등이 어려운 격오지 학교 우선 실시
 -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는 연간 38,000여명의 공익복무요원 등 전환·대체복무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국가관 함양을 위한 나라사랑교육 신규 실시(국방부 협업)
 -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하는 보훈문화교실 확대(500→800명)
 -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보훈대상자 과정 운영(190명)
 - 1일 보훈교실을 통한 올바른 국가관 형성 도모(500명)
- 기념일 제정, 다양한 기념행사 거행
 - 보훈선양의 대상이 된 역사적 사건 등이 발생한 특정한 날짜, 기간에 기념식과 다양한 기념행사를 거행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함
 - 유형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독립운동 관련

- 3.1절,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4.13), 광복절(8.15), 순국선열의 날(11.17)
- 정부기념식, 만세재현·백일장·음악회 등 기념행사(자자체, 보훈단체 등과 협력)

● 자유민주주의 수호, 국가안보 관련

- 6.25 사변일, 6.29 제2연평해전 기념일
- 정부기념식, 참전용사 위로연 등 기념행사(지자체, 관련 단체 등)

● 민주화운동 관련

- 3.15 의거 기념일, 4.19 혁명 기념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 정부기념식, 사진전시회, 추모제 등 행사(지자체, 관련 단체 등)

● 현충일 및 호국보훈의 달

- 6.6 현충일: 정부추념식, 전 국민 묵념, 헌화 및 참배
- 6월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로격려 행사, 나라사랑 큰 나무 달기 캠페인, 음악회, 각종 보훈문예 등 행사

※ 국가보훈처는 2016년도 업무계획에 있어서 영토 수호의 희생·공헌을 알리는 보훈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있음

- 독립행사는 영토를 되찾은 독립정신을 미래의 국민 호국정신으로 계승시킬 수 있도록 실시
- 호국보훈의 달 행사(현충일, 6.25 상기 행사)는 영토 수호의 희생·공헌을 감사기억하고, 그 의지가 미래세대로 이어지는 행사 거행
 - * 전 국민 묵념 캠페인, 오피니언 리더 릴레이 메시지 전달 등
- 서해수호의 날 행사(천안함,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는 북한도발을 상기하고,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한 ‘안보다짐의 날’로 거행
 - * (3월 넷째 금요일) 북한도발 규탄 등 국민 안보의식 고양, (4.16) 국민 안전의식 고취
- 다양한 보훈행사 개최를 통한 호국정신 확산 추진
 - ① 호국보훈퍼레이드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참전용사 명예 선양
 - ② 청소년 호국정신 고양 행사 연중 실시
 - * 보훈문예물 공모전(5~6월), 나라사랑미술대회(9월), 애국가UCC(10월) 추진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 순직 경찰 및 소방공무원 추모행사 첫 실시
 - * 국민안전처, 경찰청 등 유관 부처와 협업 사업으로 추진

○ 역사적 자료 편찬 및 전승

- 독립운동사, 참전사 및 민주운동사 등에 관련된 사료 수집 및 편찬·보급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함

- 유형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독립운동 관련 학술회의 지원 및 문헌 발간
 - 학회, 기념 사업회, 관련 단체의 학술회의 지원
 - *연간 국제 학술회의 2~4회, 국내 학술회의 30~40회
 - 사료집, 전기, 수기, 문집, 관련 인사 증언집 등 발간, 공공도서관 등 보급
 - '공훈전자사료관'(e-gonghun.mpva.go.kr)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
- UN군 참전국 참전사 편찬사업
 - 2004년부터 프랑스, 미국, 터키, 그리스, 콜롬비아, 필리핀, 벨기에 등 10개국

○ 현충시설 및 사적지 관리·활용

- 보훈선양시설로서 현충시설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과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한 상징적 인프라로서 대표적인 국가상징시설이며, 국가보훈 상징기능의 중요한 토대임¹⁷⁾
 - 이러한 현충시설은 독립운동 및 전쟁 관련 각종 기념물을 포함하여 국내에 1,862개소, 해외에 788개소가 산재해 있으나 관리 주체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민간단체, 학교 등으로 다양하여 책임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¹⁸⁾
 - 특히 해외에 산재해 있는 독립운동 시설물은 일부 국가보훈처와 유관단체에 의하여 정비된 곳도 있으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임¹⁹⁾
- 현충시설을 건립, 관리, 활용하는데 있어 중심 주체로서 전담 조직이 필요하며, 이 전담조직은 관련 부처, 지자체, 민간단체와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총괄적인 추진 체계와 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²⁰⁾
 - 전담 조직은 주요 업무 영역으로 ① 현충시설에 대한 상시관리와 보수 기능, ② 현충시설 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기능, ③ 미지정 현충시설에 대한 조사발굴 기능, ④ 현충시설에 대한 교육·홍보 기능 등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²¹⁾

※ 국가보훈처 2016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국내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은 다음과 같음

- 국가수호 관련 현충시설 건립

- 호국관련 시설이 없는 호남지역에 호국기념관 건립 추진(2016~2019, 192억원)
-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을 준공(2016년 10월)하여 영토수호를 위한 국민호국정신 함양의 도장으로 활용

* 사업기간('13~'16), 규모 24,302㎡, 총사업비 129억원

17) 한국의정연구회, 『보훈문화진흥원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 (2015. 8), p. 42
 18) 한국의정연구회, 『보훈문화진흥원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 (2015. 8), p. 42
 19) 한국의정연구회, 『보훈문화진흥원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 (2015. 8), p. 42
 20) 한국의정연구회, 『보훈문화진흥원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 (2015. 8), p. 42
 21) 한국의정연구회, 『보훈문화진흥원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 (2015. 8), p. 42

- 현충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안내판 설치 및 노후시설 개보수 추진
 - * 2015년 268개소 실태조사 후 17개소 개보수, 43개소 안내판 설치
- 국내 독립운동 관련 현충시설 체계적 관리
 - 서대문 독립공원 내 순국선열 위패 봉안관(독립관)을 2만 위 규모의 ‘독립의 전당’으로 재건립 (2016~2019)하여 국가가 직접 관리
 -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현충시설의 단계적 국가이관 추진
 - * 2016년 1월부터 매헌 윤봉길 의사기념관(서초구)을 국가에서 관리
- 유형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독립운동 관련
 - 국내: 백범 김구 기념관 등 749개소
 - 국외: 상해임시정부청사, LA 대한민국 국민회 기념관 등 788개소

<표 2>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현황

| 계 | 중국 | 러시아 | 일본 | 미국 | 유럽 | 멕시코 | 쿠바 | 동남아 | 기타 |
|-----|-----|-----|----|----|----|-----|----|-----|----|
| 788 | 402 | 103 | 53 | 94 | 19 | 49 | 13 | 44 | 11 |

※ 2016년 국가보훈처 업무계획에 따르면, 해외 주요 독립운동유적 보존·관리 강화 계획은 다음과 같음

- 총칭 임시정부청사 전면 전시교체 및 개보수를 통한 재개관(2016년 상반기)
 - * 하얼빈 안중근의사기념관 개관(2014년), 상하이 매헌기념관·임시정부청사 재개관(2015년) 완료
- 네덜란드 헤이그 이준열사기념관 리모델링(2016년 상반기)
- 중국 내 독립운동 관련 주요장소에 표지물 설치 추진(8개소)
 - * 이육사순국지, 황포군관학교, 합니하 신흥무관학교 터, 한국광복군제3지대 성립장소 등
- 국외 시설 현지 관리 기관 추가 확대(8 → 12개) 및 한인단체, 역사학자, 기업체, 재외동포 등 명예관리자 신규 지정 추진
 - * 향주임시정부기념관(중국동부), 항일독립운동유지연구회(중국목단강) 등 MOU 추진
- 6.25 전쟁 관련
 - 국내: 전쟁기념관, 격전지 기념탑 등 984개소
 - 국외: 한국전 참전 기념관·기념탑 등 233개소

○ 국립묘지 조성·관리 및 유해 발굴·봉환

-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국립묘지에 안장, 국가의 성역으로 관리하고 국민이 즐겨 찾는 교육공간으로 육성
- 유형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립묘지 조성 및 관리
 - 서울 현충원(국방부), 대전 현충원, 4.19 민주묘지, 3.15 민주묘지, 5.18 민주묘지, 영천·임실·이천 호국원
 - 유해 발굴 및 봉환 사업
 - 국외선열 유해봉환은 일제시기에 중국, 러시아, 미국 등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작고하여 현지에 묻힌 애국선열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여 국립묘지 등에 유해를 마련해줌으로써 선열의 유지와 충의를 기리는데 그 목적이 있음²²⁾
 - 유해봉환사업은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관련 유족의 희망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후손이나 관련 유족이 없고 묘소가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 관련 기념사업회나 현지 관계자에게 묘소 단장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원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²³⁾
 - * 매년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에 따른 유해봉환 대상자 지속적으로 발생

<표 3> 2005년 이후 국외안장선열 유해봉환 현황

| 구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인원 | 7 | 4 | 6 | 0 | 6 | 1 | 0 | 3 | 2 | 2 | 0 |

자료: 국가보훈처(2016), 「내부행정자료」, e-나라지표.

- 애국선열 유해봉환(중국, 미국 등 안장)
 - *1946년부터 시작
-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안장(국방부)
 - *2000년도부터 시작

- 보훈인물을 통한 보훈의식 고취
 - 달력, 포스터,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

※ 2016년 국가보훈처 업무계획에 따르면, 호국영웅 선양²⁴⁾

- 2016년 국가보훈처 업무계획에 따르면, 다중밀집지역 및 상징적 장소에 호국영웅 상징물을 건립하여, 국민들이 호국영웅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도록 추진

22) 한국의정연구회, 『보훈문화진흥원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 (2015. 8), p. 37

23) 한국의정연구회, 『보훈문화진흥원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 (2015. 8), p. 38

24) 국가보훈처 2016년 업무계획

- 지역별·학교별 호국영웅 명비 및 동상 건립
 - 근린공원 등 주민 근접공간에 지역 출신 참전자 선양을 위한 명비를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호국 의식 제고
 - 학교별로 출신 선배 참전영웅 명비를 건립하여 후배 학생들의 자긍심 및 호국정신 고취
 - * 경남고, 군산상고 등 학도병, 전사자가 많은 학교 우선 선정하여 추진
- 지역별로 대표적 호국영웅을 선정하여, 지역 내 중심지에 호국영웅 동상을 건립
 - * 김만술 대위, 현봉학 의학 박사, 김홍일 장군 기념동상 등 5개
- 제1·2 연평해전, 연평도 국지도발 등 전투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호국영웅의 흉상 등을 건립하여 국민 호국정신 제고
 - * 2015년 서정우 하사, 문광욱 일병 흉상(연평도 국지도발), 윤영하 소령 동상(제2연평해전) 등 호국영웅 출신 모교에 흉상 등 건립
-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물 등에 호국인물 명칭 부여
 - 도로, 학교 내 강의실 등에 호국영웅 명칭 부여 및 명명식 실시
 - * 2015년 김재옥 길(충북 충주), 고광수 대위 강의실(광주 제일고) 등 7개 명칭부여
 - 군부대 시설물 등에 ‘우리부대 출신 호국영웅’ 명칭 부여 추진
 - * ‘15년 채명신 홀(육군본부), 심일관(7사단 수색대대) 등 69건 명칭부여
 - 청소년 대상 호국영웅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우리고장 호국영웅에게 편지쓰기 캠페인, 참전유공자 세족식 등 실시
 - 일상속의 호국영웅 홍보 및 캠페인 등 연중 실시
 - 6·25 전쟁 참전 호국영웅 선양 방안 모색을 위한 관련학화전문가 등 연계한 학술회의 개최(연중)
 - 호국영웅 선양 캠페인 영상 제작 및 버스·지하철 등 영상 매체 송출장치를 활용하여 홍보 실시 (2016년 6~7월)
 - 2015년도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호국영웅 선양 사업 백서 발간(2016년 2월)
- 이밖에도 다음과 같은 나라사랑정신 선양 홍보 활동이 진행되고 있음
 - 보훈의 상징을 통한 국민통합
 - 6월 호국보훈의 달에 ‘나라사랑 큰 나무’ 배지 달기 운동 전개
 - 온라인을 통한 나라사랑정신 함양
 - 나라사랑교육 자료 홈페이지 구축
 - 나라사랑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 방송사 등과 연계한 보훈문화 확산
 - 매년 ‘나라사랑 보훈음악회’ 개최
 -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방영

- 독립군가 「다시 부르는 노래」 온라인 포털 무료 다운로드

5.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

○ 보훈선양정책 연구개발 역량 강화²⁵⁾

- 보훈선양정책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확보, 교육내용의 연구,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뿐만 아니라 정책의 연구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나 전문기구, 인력이 매우 부족하여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 한정되어 있음
- 국가유공자들이 추구했던 독립·호국·민주의 가치를 나라사랑정신으로 승화시켜 국민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이에 관한 심층 연구와 정책개발이 따르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보훈선양정책의 추진 내용과 방법, 각종 교육내용 연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전담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전담 연구기관은 저명인사, 전문가 등을 확보하여 국가·사회공동체를 통합하고 국민적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억의 정책 연구전문개발기관으로 육성해야 함

○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나라사랑교육의 체계적 추진체계 확립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공훈을 기억하고 계승하여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나라사랑교육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나라사랑교육정책의 수립과 추진은 정부·지방자치단체, 학교, 연구기관 등이 상호 협력하여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대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임
- 국민의 나라사랑정신과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지속적으로 함양하고, 특히 청소년 세대의 건전한 국가관과 나라사랑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법률 제정, 전담조직 설립 등 제도적 기반의 확충이 필요함
- 현재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나라사랑교육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 기관의 자료를 통합하기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기구의 마련이 필요함

○ 국내·외적으로 환경 변화가 심한 현 상황 속에서 새로운 시대상황에 적합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본이 되는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특히 미래 세대를 포함한 전(全) 세대에 대한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나라사랑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

- 전 국민의 보훈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필수적이고, 각 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효율적인 방법과 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 학교교육에서의 나라사랑교육 강화

25) 한국의정연구회, 『보훈문화진흥원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 (2015. 8), p. 41

- 국가유공자를 통한 전승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보훈단체 내 ‘영웅적인 인물’을 발굴하여 각 급 학교 나라사랑교육 과정에 투입할 필요가 있음 (각 보훈단체의 전승교육 가능자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할 필요가 있음)
 - 보훈인물 자신이 직접 경험한 바를 전하는 전승교육은 학생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 커다란 효과를 수반할 수 있음
- 보훈의식 고취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강화가 필요함
 - 현재의 방식과 콘텐츠만으로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이스라엘의 중고등학생 나라사랑교육 ‘셀라흐 교육’ 벤치마킹 필요함
 - 교과학습: 월 5시간
 - 체험학습: 월간 1회 6시간 / 연간 1회 2박 3일
- 학령 전 보훈의식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신설이 필요함
 -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어린 시절의 교육 효과는 평생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학령 전 교육의 중요성에 국가적 관심을 가져야 함
-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나라사랑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범정부적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임
 - 한국 안보상황이 지정학적으로나 북한의 호전성으로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나라사랑교육과 연관된 관계 부처들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
 - 국가보훈처는 2014년에 ‘나라사랑교육 총괄부처’로 지정²⁶⁾되어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의 기반 구축을 위한 추진체 역할을 맡게 됨으로써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안전처, 방송위원회 등과 협력할 수 있게 되었음
- 교육부, 국방부 등 유관 부처와의 협업
 - 국가보훈처 이외에도, 교육부의 경우 학생들의 학교 교육 교과과정에, 행정자치부의 경우 중앙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연수교육과정에, 국방부의 경우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 과정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나라사랑정신 함양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국보훈 관계 장관회의’를 운영하거나 기존의 국가보훈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때에 따라 나라사랑교육이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는 여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여야가 공감하는 나라사랑교육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6) 2014년 6월, 국무조정실은 「국가보훈기본법」에 의거하여 국가보훈처를 나라사랑교육 총괄부처로 지정함으로써 국가보훈처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의 기반 구축을 위한 추진체 역할을 감당케 되었다.

- 나라사랑교육의 정상화는 가르치는 사람들부터 나라사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때라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나라사랑교육지침서’가 필요함
 - 지침이 없을 경우 가르치는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특정 이념에 따라 중구난방의 나라사랑교육이 이루어져 교육대상자의 국가정체성 확립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어 국민통합에 해를 끼치게 되고 나아가 우리의 내적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앞으로 한국사회는 다양성의 확산, 양극화 현상의 심화, 그리고 인터넷과 SNS 등 통신매체의 비약적인 발전과 확산으로 갈등과 분열이 심화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전문가뿐만 아니라 여야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차원에서 ‘나라사랑교육지침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 나라사랑교육 확대를 위해서는 걸맞은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차관급인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관의 위상으로 격상이 요구됨
 - 남북한이 이념 및 체제대결로 첨예하게 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달리 우리는 대 국민 이념교육을 위한 장관급 주무 부처가 따로 없고, 차관급 부처인 국가보훈처가 나라사랑교육을 통해 호국정신을 함양하고 있으나, 장관급 위상을 갖지 못해 나라사랑교육 확대에 어려움이 있음
 - 현재의 국가보훈처 예산은 보훈대상자 지원·관리에 예산과 인력이 편중되어 있어 보훈선양 분야에 대한 예산 배정이 적어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 위협,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 등 위기에 처한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하드파워 강화뿐만 아니라 소프트파워의 강화를 통한 내적 안보의지도 다져야 마땅함
 -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이들을 본받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나라사랑교육 강화에 국가적 관심과 대응이 뒷받침되어야 함
 - 국가보훈은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에 바탕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훈의식은 바로 이 희생과 헌신을 기반으로 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바, 보훈의식은 시민사회의 유지·발전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초과임무 의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시민교육 차원에서 보훈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때 시민사회는 더욱 성숙할 조건을 갖추게 될 것임

[발제②]

보훈보상의 사각지대 해결방안

남 광 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1. 들어가며

국가보훈은 국가 존립과 관련한 최고의 상징정책으로 국가 유공자들과 유가족은 국가로부터 합당한 예우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보훈보상의 이념은 국가에 공훈이 있는 사람을 예우하고 그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를 위한 희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가수호로 보훈이념의 가치는 국가수호며 국가보훈정책은 전쟁에 참여하거나 군인으로 일정 기간 복무한 사람에 대한 정책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쟁에 참여했거나 복무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정책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이른바 ‘보훈의 사각지대’에 있는 보훈 대상자들이 있다. 특히, 특수임무수행자와 6·25 전쟁 비정규군 공로자 등과 같이 실제 전투에 참여했으면서도 보훈대상에서 제외된 보훈 사각지대에 있는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법제와 보상이 필요하다.

현재 국가보훈처의 「보상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특수임무’란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특수임무수행자’는 “1948년 8월 15일부터 1994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에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다. 특수임무수행자는 14,000여명의 비정규군으로 8,000여 명 사망자와 3,000여 명의 전상자를 냈고 북한에 170여명의 생존자가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전쟁 이후 50 여 년 간 비밀사항이었다 공개되어 관련 입법 조치가 미비하다보니 특수임무수행자가 북한의 장기수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 기피 인물로 인식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다가 2001년 12월 23일 「보훈법」 일부가 개정되어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길이 열렸으며 2004년 1월 29일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 의해 보훈을 받는 대상은 특수임무수행자(행방불명자), 특수임무 부상자, 특수임무 공로자들이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2002년부터 확인된 사망자 유족들에게 전사통지서 발송, 위로보상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는데 특수임무자 해

당 여부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보상금 대상자는 4,400여 명이었다. 이후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국가보상은 많은 부분 이루어졌으나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들이 있다. 특히, 6·25전쟁 중 애초에는 자발적인 유격부대로 조직되었다가 이후 미 극동사령부 예하 KLO 부대로 편성되어 혁혁한 전과를 세웠고 전쟁 이후에는 한국군으로 인계된 한국 유격군에 대한 보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이들에 대한 국가보상이 시급한 상황이다.

2. 국회 <국방위원회>까지 통과하고도 <법사위원회>에서 계류된 KLO 한국 유격군 보상 문제

6·25전쟁 중 비정규군 공로자로 자발적으로 결성된 유격대와 같은 경우, 전쟁기간 중 보상 및 보호를 위한 근거 기록이 미비해 관련 법률안 마련과 보상 실시가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보상에 문제가 되는 점이 이들이 비정규군이기에 때문에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자생적으로 조직된 유격부대들이 KLO부대로 편성되면서 미군의 전력부대로 활용되었고 종전 시 한미 당국에 의해 준 군인의 지격으로 한국군에 이관된 과정을 보게 되면 이들은 당연히 정규군으로 대우받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KLO 한국 유격군에 관한 보상은 「6·25전쟁전후비정규군공로자보상에관한법률안」으로 2011년 12월 당시 한나라당의 김동성 의원의 대표 발의에 의해 법제화가 진행되었으나 18대 국회 회기가 만료됨으로써 자동 폐기되었다. 그러다가 19대 국회에서 ‘6·25참전비정규군공로자 보상등에 관한법률안’이 비정규군의 용어로 인해 유사 보상신청 대상들과 오인될 수도 있어 법률안명을 ‘6·25전쟁중적후방지역KLO한국유격군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수정, 변경해서 논란이 되는 점들이 충분히 소명되고 확인되어서 법안담당 위원회인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해 법률안 확정여 유력해졌으나 <법사위원회>에 계류되어 진전이 없다가 19대 국회가 종료되고 말았다.

KLO한국유격군과 비슷한 경우인 특수임무자의 경우에는 현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법률」에 따라 보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KLO 한국유격군 공로자의 형평성과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국가보훈의 목적은 ‘국가의 끝까지 책임’에 입각해 국가 유공자들이 행한 공헌과 희생에 대해 물질적, 정신적 보상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KLO 한국유격군 보상과 같이 보훈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현 보훈체계의 문제점과 대책을 고찰해 보고, 이를 통해 나라를 위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보훈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 사실로 봐도 1950년 7월 14일 이른바 <대전각서>로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

인 맥아더에게 이양했고 맥아더사령관은 주한 미8군 사령관인 워커대장에게 이를 위임해 이후 한국군은 휴전 시점까지 미군의 전략 지휘를 받는 직속 전술부대로 운영되었다. 따라서 작전지휘권 이양 이후 미8240부대, 일명 KLO 부대의 명령과 작전을 위한 지시는 한국군의 명령과 동일한 것이었다. KLO 한국 유격군은 중공군 참전으로 전세가 역전되면서 미군 직할의 전략군으로 미 〈극동사령부〉에 배속되어 미군의 전략에 맞추어 북한 지역의 남포, 원산, 정주항 앞을 봉쇄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하여 적의 남하를 저지하는 선봉적 역할을 수행했다. 참고로 KLO 한국 유격군과 비교되는 백골병단은 당시 한국군에 배속되어 약 3개월에 걸쳐 적진 침투 등의 전술적 임무를 수행했다.

1951년 1월 6일에는 해군 서해지구 사령관 이희창 중령의 건의에 따라 서해 각 도서에 피난중인 북한 출신 치안대원 20,000명 활용 건의가 승인되어 모집된 인원 등으로 유격군 30여개 부대를 창설했다. 유격군 창설 초기인 1950년 12월부터 1951년 5월 사이 유격군 대상 인력자원이 부족한 시기인 1951년 3월 28일 한국 육군 참모장 극비지령 제11, 17호 명령으로 13개 연대를 백연도와 교동도에 있는 미 유격군 사령부(8240부대)로 진출 인도하기도 했다. 이처럼 한국 유격군은 전쟁 초기부터 군 편제에 다른 지휘체계에 따라 전투 임무를 수행했던 것이다.

따라서 6·25전쟁이 종전된 이후 KLO 한국 유격군의 군적 관련은 다음과 처리되었다. 1953년 8월 16일 당시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인 손원일과 재한정찰활동 합동사령부(CCRAK) 사령관 알카볼트 W. 스투워드 사이에 체결된 ‘재한 정찰활동 합동사령부(CCRAK)을 일방(一方)으로 하고 대한민국 국방부를 타방(他方)으로 하는 재한 국제연합유격대에 관한 상호 책임에 관련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서 “1. 한국 국방부는 KLO 한국 유격군(8240부대)을 제8250한국군 부대라는 잠정적 명칭의 준군사적부대를 편성한다. 2. 제 8250한국군부대의 작전상의 권리는 제 (KLO)8240미군부대의 사령관에게 부여한다. 3. 국방부는 제 8250부대에 보직된 한국인 준 군인의 부상자와 전사자 유가족에 대해 한국군 군인에 공여되는 바와 동일한 은전을 공여한다. 4. 국방부는 제8240부대의 한국인 직원을 제8250부대로 전속시키고 필요한 수의 직원들에게 그 직무에 상당하는 적당한 계급을 부여한다. 5. 제8250한국군 사령부내에 군법회의가 설치된다.”고 명시한다.

KLO 한국 유격군(8240부대)에서는 위의 손-스투워드 협약 후 각 예하 부대에서 부대 역사를 보고받아 보관했으나 제8250부대는 전사 및 부상자 명단만 받아 조치하고 부대 역사보고나 개인기록 없이 군번과 계급만 부여했다. 이로 인해 1954년 2월초까지 611명, 3월초 1,494명의 탈영병이 발생했고 이들을 제외한 11,832명이 전방에 배치되었다. 결국 KLO 한국 유격군은 전쟁 중 한국과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많은 전과와 전략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휴전이 되면서 다시 한국군으로 전환, 입대하여 군 2중 복무를 펼쳤다. 당시 장교로 근무한 유격군은 계급이 적의 조정되어 한국군에 전환되었고 사병은 그대로 전환되었다. 당시 국방부는 유격군에게 〈병역법〉을 발동해 징집함으로써 전쟁 중 잔여 군복무기간이 아닌 2중 군 복무를 발동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국방부는 유격군에게 보수교육을

시키지 않고 군부대에 전환시켰는데 이는 유격군의 군 신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병역법>이 아닌 <군인사관관련규정>에 따라 한국군에 배속시켜야 했던 것이다. 따라서 KLO 한국 유격군이 미군에 배속되어 참전해 활동한 약 3년의 기간을 군복무 기간으로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군번과 계급 및 보상을 국가가 해 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보훈의무라 할 수 있다.

3.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선(先)명예회복의 필요성

국회는 2004년 3월 22일 백골병단을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로 명예회복과 보상을 시행했고 특수임무자의 경우에도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보상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형평성 차원에서 KLO 한국 유격군에 대한 보상은 당연한 조치라는 것이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04년 1월 29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뒤 2011년 10월 31일까지 특수임무수행자 1만 3,848명 중 8,428명으로부터 보상 신청을 받아 2013년 3월까지 6,083명에게 6,884억여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345명은 ‘특별한 희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보상금 신청이 기각됐다. 국방부가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 특수임무수행자는 1948년 8월 15일~2002년 12월 31일 군 첩보부대에 소속돼 특수임무를 수행하거나 북파공작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다. 국방부는 또 2007년부터 2011년 10월 말까지 전사자 또는 행방불명자로 판단된 북파공작원에 대한 ‘유가족 찾기 사업’을 벌여 7,291명을 확인했다. 국방부는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3,952명과 주소지가 북한으로 조회된 1,333명 등을 제외한 1,733명에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이처럼 정부가 유격군이 보상 문제를 요청하기 이전인 2004년도에 백골병단과 특수임무 수행자들에 대한 보상법을 제정, 시행하면서 KLO 8240부대를 배제한 것은 불공정한 대우라는 것이다. 그리고 보상에 필요한 정부예산의 문제를 들고 있으나 18대 국회 국방부에서 작성 제출한 유격군 보상법(안)과 18,19대 국회에서 작성된 전문 위원실 검토 보고서에도 대상인원 18,994명 중 실제 보상 신청 예상인원은 5,699명으로 예상된다고 하였으며 그 중에도 현재 연락되고 있는 생존자는 1,55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KLO 한국 유격군은 6·25때 국가수호의 일념으로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가해 국가안보에 큰 기여를 한 분들이다. 그리고 오랜 세월 희생에 대한 인정이나 대가도 없이 어려운 환경을 혼자 이겨온 분들이다. 그러나 시대적 환경과 제도적 여건의 미비로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살아남은 대원들도 대부분 80 중반 이상의 고령자들로 얼마나 더 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KLO 한국 유격군 활동에 대한 조명과 함께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들은 오랜 세월 희생에 대한 인정이나 대가도 없이 어려운 환경을 혼자 이겨온 분들이나 시대적 환경과 제도적

여건의 미비로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살아남은 대원들도 얼마나 더 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격대 활동에 대한 조명과 함께 명예 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다.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으면 우선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보훈조치를 먼저 시행하고 보상은 시일을 두고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들에 대한 국가의 기본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호국보훈의 달' 6월, 보훈정책 방향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

[토론①]

1.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보훈정책 방향 2. 보훈보상의 사각지대 해결방안

차 승 만

백석대 교수/한국보훈정책연구소장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거나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정신적, 물질적 예우와 보상을 부여해 그들의 영예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 주는 보훈제도는 자못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본 토론회에서 국가보훈의 강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보훈정책 방향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먼저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보훈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하신 오일환 박사님께서 보훈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들에게 보상이 국민들의 책무임을 강조
-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사회의 극심한 갈등과 심화를 내적 안보, 국민통합, 국가정체성, 나라 사랑 등 국가보훈으로 접근
- 국가보훈의식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보훈선양정책 강화,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다음 남광규 박사님께서서는 “보훈보상의 사각지대 해결방안”이란 주제로 국가보훈의 사각지대에 있는 6,25전쟁 때 자발적으로 조직된 이후 극동사령부 예하 KLO 부대로 편성되어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도 국가유공자로 진입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 정부는 이제라도 KLO 부대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절충한 “타협안” 제시
- 국회는 18, 19대에서 발의하였지만 회기가 만료됨으로써 자동 폐기된 것을 감안 20대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 보상을 통한 명예 회복

질문

○ 주요 선진 보훈국가의 보훈행정대상자의 요건과 예산과 보상

- 과거 국회는 표를 의식해 사람들이 많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주지만 규모가 작으면 안해 주는 등 정치적으로 움직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를 위한 극복방안은 무엇인가?
- 현재, 국가유공자 진입의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 국가보훈처 예산과 국가유공자의 보상이 적절한가? 아니면 어느 정고가 국민들과 유공자들이 납득 할 수준인가?

○ 주요 선진국의 선양사업을 제시하고 현재 한국에 선양사업의 문제점과 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토론②]

‘호국보훈의 달’ 6월, 보훈정책 방향 이대로 괜찮은가?

이 옥 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보훈정책 방향”

- 한국 근현대사는 고난 극복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음: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 6·25전쟁, 남북 분단에 따른 북한의 지속적 무력도발, 4·19, 베트남전 참전, 5·18민주화운동 등

- 이에 따라 국가 ‘보훈수급대상’은 18개 분류로 구분됨: ①독립유공자(순국선열·애국지사), ②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③무공·보국수훈자, ④재일학도의용군인, ⑤4·19혁명사망·희생·공로자, ⑥순직·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⑦6·18자유상이자, ⑧지원순직·공상군경, 지원순직·공상공무원, ⑨재해사망·부상군경, ⑩재해사망·부상공무원, ⑪⑫⑬참전유공자(6·25전쟁, 월남전쟁, 6·25 및 월남), ⑭고엽제 후유의증, ⑮고엽제후유증2세, ⑯5·18민주유공자(사망·행불·부상·기타희생자), ⑰특수임무유공자(사망·행불·부상·공로자), ⑱중·장기복무제대군인

- 국가보훈처 1년 예산: 약 4조4천억(2015년 기준). 국가총예산 지출총액 379조 중 1.16 ~ 1.68% 정도

- 그동안 우리나라 국가보훈정책은 실질적인 보답방식인 물질적 보상에 중점을 두었고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제고 및 의료·복지 서비스 향상, 나라사랑 정신 확산, 보훈선양 사업 활성화 및 다양화 등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음

- 그러나 보훈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자발성에 의한 ‘기억의 정치’여야 함.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해 ‘기억(memory)’과 ‘기념(commemoration)’을 통해 국가적 자긍심을 키우고 선진시민의식 함양. 국가에 대한 신뢰와 자긍심은 안보의식의 바탕이 됨. 나아가 나라사랑 등 국가보훈의식은 사회갈등해소를 통한 사회통합효과로 인해 경제성장에도 기여

- 예) 「경찰교육원 차일혁 홀」: 경찰 교육원 내 차일혁 총경을 기리기 위한 강당. 차일혁 총경:

1920-1958, 독립운동가이자 경찰, 빨치산 토벌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 빨치산의 수장인 이현상을 사살하는 큰 전과를 올렸으며 그 시신을 수습해 장례를 치러주고 빨치산 대부분에게 귀순을 유도해 가급적 사살을 피해 적을 줄이는 등 무조건적인 토벌보다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동족상잔의 비극을 인식하는 등 애국애민의 표상이 됨

- 보훈대상자들 간의 갈등 극복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 국가유공자와 단체 간의 “서열주의” 욕구는 잘 못된 관행.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서열을 매기고 경중을 따지는 것은 어불성설. 국가를 위한 희생은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할 대상이지 등급의 대상은 아님

- 한편 국가보훈대상자와 단순 사고자에 대한 보상의 형평성은 제고되어야 함: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은 3천100만원-8천100만원의 일시금, 38만원~86만원의 유족연금과 60여만 원의 보훈연금 지급

□ “보훈보상의 사각지대 해결방안”

- 보훈보상의 사각지대: 6·25전쟁 중 자발적인 유격부대로 이후 미국 극동사령부 예하 KLO 부대로 편성되어 전과를 세웠고 전쟁 이후 한국군으로 인계된 한국 유격군에 대한 예우와 보상의 필요성 제기 등 향후 선양해야 할 보훈대상자를 발굴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어야 함

- 제20대 국회에서 관련법 제정 시급: 「6·25전쟁중전후방지역KLO한국유격군작전수해공로자에 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안」

□ 보훈정책 개선과제

- 복잡한 보훈관련 개별법의 단순화: 국가유공자법, 민주화유공자법, 공부유공자법, 제대군인지원법 등으로 통폐합시켜 보훈의 질적 향상 제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훈대상자 지정의 논란의 소지를 줄이고 ‘전 국민의 국가유공자화’ 방지

- 정치권의 국가보훈기본법의 목적에 어긋나는 대상자의 국가유공자 요구: 국가보훈기본법 제1조는 “국가보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

량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국회에서 제출된 일부 법률안의 경우,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자’까지 민주유공자로 포함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음

- 특히, 정치권에서의 호국보훈 관련 정책 입안 시 이념적 고려는 왜곡된 정책을 양상하고 결국은 왜곡된 국가관 형성으로 이어짐. 예를 들어, 야권의 ‘호국’ 관련 예산 삭감시키려는 것은 제대로 된 국가보훈정책을 어렵게 함

- 과거의 관 주도의 보훈선양 의식 함양을 넘어 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민간차원에서의 보훈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보훈정책 거버넌스도 필요함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4길 38 국제화제 3층 (북창동 93-45)

Tel : 02-741-7660~2

Fax : 02-741-7663

<http://www.cubs.or.kr>